

GGM근로자들 “공동복지프로그램 이행” 촉구

회사 출범 시 약속했던 주거지원 등 사회적 임금 보전 미미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광주시에 강력 촉구

전국 최초의 지자체 주도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이 광주시에 '공동복지프로그램' 신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GGM 상생협의회 근로자위원 일동은 11일 광주시에 GGM 출범 당시 광주시가 사원들에게 약속한 공동복지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월 23일 광주시에 실효성 있는 이행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GGM 출범 당시 전 사원이 평균 3500만원의 적정임금을 받는 대신 지자체의 공동복지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기로 약속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가 GGM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한 주거, 기타 복지 등 공동복지프로그램은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며 "광주시에 노사민정협의회의 약속을 믿고 입사한 근로자들의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주

장했다. 이들은 "광주시에 일자리를 만들 때 1인당 600만~700만 원의 사회적 임금 혜택을 약속했지만 현재 공동복지프로그램에 직접 지원해주는 비용은 1인당 평균 161만원에 불과하고 연간 급여 대비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 "광주시가 주거비와 교육비·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비는 어린이집 운영비로, 교통비는 통근버스 지원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유일한 항목인 주거지원비는 1인당 평균 73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기자

'금품요구 의혹' 조선대 교수 엄중 수사해야 조선대 불공정 해결위 "경찰 수사에 학생들 침묵 종용"



이들은 "특히 광주시가 2021년에 발표한 산정지구 일대 주택 건설은 불투명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만큼 장기 계획에 따른 주거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임시 주거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하루빨리 주거의 위치와 형태, 규모, 소위 여부 등 구체적인 청사진과 일정을 담은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광주시가 근로자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협정서 계약 미이행과 책임자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모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책임을 물겠다고 선언했다.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인용 불공정 해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횡령·폭행·금품 요구 의혹을 받는 교수진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대 졸업생·교직원집위원회·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비리의혹이 불거진 두 교수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A·B 교수는 조선대 무용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모아 경찰의 질문에 침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라인 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시간강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원 채용 비리의 정황을 알고 있는 직·간접 당사자들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없도록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김도기 기자

코로나19로 주춤했던 5·18민주묘지 참배객 늘었다

4월 참배객 1만3856명...감염 확산 첫 해 대비 3배 급증

5·18민주화운동 42주년 정부 기념식을 여드레 앞둔 가운데 국립5·18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 발길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 2년 간 주춤했던 참배객 수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직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4월 한 달 동안 5·18민주묘지를 찾는 참배객은 1만 385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46명에 비해 1.7배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시작된 2020년엔 4월 한 달 간 참배객이 4557명에 그쳤던 것과 비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5·18 항쟁 42주기를 맞은 계기 행사·교육이 늘어나는 이달 들어 참배객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이달 1일부터 전날까지 열흘 사이 민주묘지에는 1만906명이 다녀가, 벌써 지난 4월 한 달 참배객 수에 육박했다.

지난해 5월 1~10일 사이 참배객 수는 8036명, 앞선 2020년 같은 기간엔 7070명에 그쳤다. /김용범 기자

완도해경-장흥경찰서 공조 보이스피싱범 검거

완도해양경찰서는 10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서 장흥경찰서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범 A씨(20대, 남, 운반책)를 현장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이스피싱범 검거는 장흥경찰서에서 마을 현금인출기 주변에 보이스피싱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0일 오후 4시 32분경 범죄 발생 장소와 인접한 완도해경 회진과출소 수문출장소에 피의자 신병 확보 요청으로 실시됐다.

이에 완도해경은 근무 중이던 해양경찰관이 현장으로 즉시 이동, 오후 4시 34분경 보이스피싱범 신병을 확보해, 10분 뒤 도착한 장흥경찰서 강력계에 인계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양 기관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도해경과 장흥경찰서는 2021년 10월과 2022년 3월에도 보이스피싱범을 합동 검거해(총 3건) 피해확산을 막은 바 있다.

/완도=이두식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namae.com

세계김치연구소-HACCP인증원 김치 위생안전 '맞손'

김치산업 발전 위한 식품위생·안전 경쟁력 협약



세계김치연구소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이 김치의 스마트 HACCP(해썹) 확대 등 식품위생과 안전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11일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 측은 전날 세계김치연구소 강

에서 국내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 HACCP인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김치 제조 분야의 생산성, 품질과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스마트 HACCP 혁신 모델 구축 ▲김치류 HACCP 관리와

스마트 HACCP 보급·확산 ▲김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에서 제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HACCP인증원은 2020년부터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HACCP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장혜춘 세계김치연구소장은 "김치가 안전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대상 스마트 HACCP 전문 기술지도와 교육을 지원하고, 김치류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도 구축해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예약문의 : 010-3925-3842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 래 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